

오피니언

월/요/광/장

고현석



필자가 곡성군수를 처음 맡은 때가 12년 전이다. 스스로 군수를 맡겠다고 나서서 마침내 군민의 선택을 받았던 터이므로, 꿈도 컸지만 짐도 무거웠다.

돈을 끌어오는 일에만 열중하던 필자에게 문득 그것만은 아니라는 깨달음이 스쳤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막상 이를 잘 해낼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돈과 아이디어, 사람 중에 제일은

그런데 돈을 얻어내자면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내놓아야 했다. 알아서 써야 할 돈도 허비하지 않고 잘 쓰려면 계획을 잘 짜야 했다. 좋은 계획을 만들려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농촌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해 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이내 당황스러웠고, 마침내 비감 속에 망연자실했다. 당시로서는 주변의 아무에게도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마음에 새겼다. 서글프고 쓸쓸한 추억이다. 살고 있는 주민 가운데서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공무원이 대신 감당해야 했다.

필자는 군수를 그만두고 나서 지난 4년 동안 도시인퇴자가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실제의 틀을 제시해보고자 '강빛 마을'이라는 이름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은퇴자를 만났다. 특히 수도권권의 은퇴자들이 그 주된 대상이었다. 이 중 이른바 문화예술 분야의 은퇴자들 가운데는 교수 등 직장에서는 몰랐지만 여전히 연구실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하는 분이 많았다. 그런데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 작품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자기가 사람을 불러 모아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한다고 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제 막 노인의 대열에 합류한 내배의 은퇴자들은 오랜 일에서 벗어나 여행으로, 등산으로, 골프로, 바둑으로, 평생 못 가져본 여유를 즐기느라 바쁜 듯 보였는데, 벌써 상당수가 그런 즐거움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더러는 새로운 공부에서 돌파구를 찾기도 했지만, 자원봉사활동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뚜렷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주 내내 직장생활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마치 자기가 아쉬워서 봉사활동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다. 이들이 농촌에 정주한다면 참으로 소중한 인력자원으로 기능 할 터인데, 도시에서는 그 값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합당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재능으로 농촌의 청소년을 지도해 주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면, 얼마나 고마워하며, 스스로는 얼마나 보람이 크겠는가? 활기찬 제3기 인생을 열 수 있는 길은 농촌에 있다. 국가적으로는 거의 버려지다시피 되어버린 인력자원을 100% 활용하는 셈도 된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도시인퇴자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과업은 국가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강빛마을 추진위원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권오성



이번 달 초 법무부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사법협조자 형법감면제) 도입, 참고인 출석의무제·사법방해죄 신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 피해자 재판 참여 등 수사 효율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발표하였다. 같은 시기에 일부 학계에서는 위법수집 증거배제원칙 적용범위 확대,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제한, 재정신청권자 고발인으로 확대 및 검찰청장권지주의 폐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폐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한 등 수사·재판에 대한 검찰의 권한

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계가 검찰 권한을 통제한다는 명목 아래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 등과 같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낸 것은 과연 적절한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면관계상 양쪽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타당성을 논하기 어려우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검찰 권한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에 권한이 남아 있는 한 그 통제의 필요성은 계속 남게 된다. 반면,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해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단상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이같이 상반된 위 두 의견에 대해 여론도 나뉘어 있다. 즉, 한쪽에서는 검찰은 국가 법집행 확립을 위해 존재하므로 검찰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검찰이 정치 지향적이고, 특정 세력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므로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국가 기관에 어떤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는 그 기관의 존재 목적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여되어지는 권한의 특성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상반된 두 의견 모두 검찰의 존재 목적 달성 내지 검찰 권한의 적절한 통제라는 나름의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의견은 적절히 조

화가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계가 검찰 권한을 통제한다는 명목 아래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 등과 같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낸 것은 과연 적절한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면관계상 양쪽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타당성을 논하기 어려우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검찰 권한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에 권한이 남아 있는 한 그 통제의 필요성은 계속 남게 된다. 반면,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해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

빈곤층 800만명... 양극화 문제 전방위 대책 내놓아야

대한민국 4800만 인구 가운데 무려 800만 명이 빈곤층에 속한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높았다. 내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돕고 있는 한 장애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나라에서 주는 저소득층 보조금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분은 기거할 곳이 없어 한 때 노숙까지 했는데 다행히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우리 주변에는 이들과처럼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불행한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 같은 양극화 문제를 방지할 경우 계층 간 반목으로 사회적 통합은 힘들고 나중에 빈곤층의 자활포기로 이어진다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이제는 정부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기회의 평등마저 앗아가고 있는 가난의 대물림과 그로 인한 빈부 양극화는 결국 우리 공동체의 생존까지 위협할 것이다. ▲이현미·광주시 남구 백운동

기고

정재현



최근 우리시는 법인택시 부제를 8부제에서 6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부제는 운전원의 과로 방지, 차량정비 및 에너지 절약 등 안전 운행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택시운행 일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택시부제는 1973년 11월 국제유가 파동으로 인한 경제혼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소비절약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시한 것이 최초다. 우리시는 1979년 4월 법인택시 6부제 시행 후, 1984년 12월 8부제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부제는 초창기 경제난 극복 및 에너지 절약이라는 취지보다는 차

택시업계에서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6부제 시행의 필요성은 주5일제 근무의 목적과 동일하다. 운전원의 과로 방지와 차량안전 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 개선으로 택시운전자 구인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택시 영업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타 광역시에서는 이미 6부제 시행이 보편화되어 정착단계에 있다. 서울과 인천 등 택시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제외하고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은 이미 6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6부제를 도입한 부산시

광주 법인택시 6부제 시급하다

람점검 및 운전자 과로방지, 택시의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써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3~12부제로 운영되며, 전반적으로는 6부제 시행이 대세이다. 근래에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대리운전 성행 등 급격한 택시시장의 변화로 택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택시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과거와 같은 운영양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운송수입금을 맞추기 위한 과속·난폭운전 등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운전원을 구하기 어려워 무자격 운전원을 고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무자격 운전원에 의한 강력범죄가 언론지상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택시에 대한 불신이 커져 시민은 택시 이용을 꺼리고, 택시 이용객 감소는 정식적인 운전원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주5일제 근무가 내년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의 사례를 살펴보면 6부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다. 10부제에서 6부제로 변경한 부산시는 교통사고 건수가 3176건에서 1769건으로 무려 44.3%나 감소했다. 또한 6부제 변경후 영업률은 51.3%에서 57.2%로 증가하였고, 1일 영업거리는 183km에서 234.39km로 28.1% 증가하여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이 16만5000원에서 21만4490원으로 4만9490원 증가하였다. 이처럼 6부제 시행은 시민의 안전 운송과 택시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 택시시장의 업체간 과당경쟁, 과속·난폭운전으로 인한 승객의 안전운송 저해, 과로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운전원 수급 애로, 환경오염 등 많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택시 운행대수를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운전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6부제 시행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시민교통국장>

시설

광양항 개발비 부산신항 전용 용납 안된다

광양항 개발 예산 중 무려 170억 원이 부산신항 개발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을 임의로 전용하면서까지 부산신항 개발에 올인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말로는 투-포트(양항) 정책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광양항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회 국토해양위 유선호 의원이 배포한 연구기관에 의해서도 입증됐다. 한 국회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결과 광양항의 투자대비 효율이 1.35로, 부산 신항 개발로 인한 투자대비 효율 1.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면에서 광양항이 부산항보다 앞선다. 뿐만 아니라 광양항 개발은 이 같은 경제적 가치 외에도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광양항 개발비의 부산신항 전용은 또 다른 호남차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전용 예산을 광양항에 되돌려 주고 투-포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4%에 그쳤다. 또 부두 내 도로 2공구 시설비의 집행률도 겨우 35.8%였다. 예산 전용과 낮은 집행률은 정부가 양항정책을 포기하고 부산신항 개발에 전력을 쏟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양항 개발은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돼 온 국가정책이다. 특히 광양항의 경쟁력은 이미 정무 연구기관에 의해서도 입증됐다. 한 국회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결과 광양항의 투자대비 효율이 1.35로, 부산 신항 개발로 인한 투자대비 효율 1.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면에서 광양항이 부산항보다 앞선다. 뿐만 아니라 광양항 개발은 이 같은 경제적 가치 외에도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광양항 개발비의 부산신항 전용은 또 다른 호남차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전용 예산을 광양항에 되돌려 주고 투-포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 도민 뜻 따라야

지난 8월 전남도교육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던 학원 수업시간 단축 조례안이 13일 도의회 교육위에 다시 상정돼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학원 교습시간을 2시간 앞당겨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일부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이 보류됐다가 지난 8월 교육위원회의 폐지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교육위원들은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와 학원 관계자의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농·산·어촌인 전남에서 심야시간 학원 교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제한은 고액 양방과외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원 생존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폐기되면서 교육위원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먼저 학원 교습시간 단축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자는 게 주요 사

이다. 이는 또 정부의 방침이자,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입장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등 25만8457명을 대상으로 학원 수업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대상자의 65.2%가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을 찬성했다고 한다. 이제 도의회 체제로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교습시간 단축 안에 대한 여론과 실의를 제대로 살펴 교육의 주체 입장에서 냉정하게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번 교육위원들처럼 학원 측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면 더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의 본분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바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교육계의 폐해를 바로 잡자는 데 있다. 이번 조례안 처리가 그 시급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無等鼓

스웨덴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을 기금으로 해마다 그의 사망일인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거행되는 노벨상 시상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상금도 적지 않지만 '인류복지에 가장 구제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의 권위와 명예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수상자가 발표되는 10월 초엔 6개 분야의 후보에 오른 국가와 국민의 기대는 커진다. 마치 신춘문예 열병을 앞둔 작가가 지망생들처럼 마음이 달뜬다. 올해도 어김없이 노벨상 시즌이 다가왔다. 벌써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평화상을 5개 분야 수상자가 결정됐고 경제학상(11일)만 남겨두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노벨상을 둘러싼 한중일 3국의 엇갈리는 표정이다. 중국 언론에선 매년 반복되어온 개탄이 다시 쏟아졌다.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중국 국적의 수상자를 아직 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평화상 수상자로 텐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을 이끈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가 선정되면서 분위기가 더욱 뜨겁고 있다.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온 중국 정부가 노르웨이와 관계 악화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은 느긋한 표정이다. 지금까지 일본 국적자만 17명이 노벨상을 받아 세계에서 7번째로 많고, 물리학과 화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와 문학상, 평화상 등에서 고루 수상을 배출한데서 나오는 여유로움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한국도 아쉬움이 적지 않은 듯하다. 어느 해보다 유력하다는 외신들의 보도로 고은 시인의 문

학상 수상에 기대를 걸었지만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만인보'를 주제로 향연을 펼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측도 내심 기대가 었을 터이다. 한국인의 역량은 이제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와 견줄 만큼 커졌다. 우리가 지나치게 수상에 안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노벨상 콤플렉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민신문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